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제정 등 주요 법률 제개정 동향

2024.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주요 내용

□ 단말기유통법 폐지

1.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폐지 (단말기유통법 폐지)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가능
-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의 판촉 전략 시행 가능

2. 주요 이용자 보호 제도의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통한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 유지
- 고령층,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 AI기본법 제정

1.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법적 근거 마련

2. AI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 연구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AI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을 통해 AI 생태계 혁신 발전 지원

3. 고영향·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규제 대상으로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 규정
- 민간의 자율적인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디지털포용법 제정

1.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 확대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기존 장애인, 고령자 등에서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2.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성 강화

-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는 “재화·용역의 제공자”로 표현)에게만 사용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우 주로 기성품 무인정보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 * 사용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저시력자,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 음성 지원, 점자 표기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

3. 기업·시장 중심의 디지털포용 생태계 조성

-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신규 서비스·제품에 대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
-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및 기술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연구개발 투자, 장기 성장동력 지원, 수출시장 확대 등을 지원

II. 시사점

- 이번에 통과된 세 가지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자율경쟁이 활성화되고,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AI 강국으로의 도약과 함께 디지털 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은 AI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우려되는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디지털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관련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제개정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하위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및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이 창출되는 ICT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법

위반 리스크 및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 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강신욱

대표변호사

02-316-4059

sokang@shinkim.com

노진홍

변호사

02-316-1639

jhnoh@shinkim.com

이상우

수석전문위원

02-316-1716

swolee@shinkim.com

이지은

선임연구위원

02-316-1720

jeunlee@shinkim.com

장준영

변호사

02-316-4985

jyojang@shinkim.com

김상지

변호사

02-316-1831

sajkim@shinkim.com

나상우

전문위원

02-316-1690

swana@shinkim.com